

전북교육인권조례 수정 가결

도의회 교육위, 전북 교육시민단체들 의견 반영 조례 일부 내용 보완 권고 “인권대상 학교 구성원 한정, 조속한 시일 내 교육행정기관 구성원까지 포함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전북 교육청이 발의한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은 현재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은 전북 교육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해왔다. 인권 보장 범위가 학교 안으로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날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은 전북도의회 앞에서 조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정·보완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이러한 교육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교육인권조례에서 인권대상을 학교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청이나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이 제외됐다”며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전

북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구성원까지 인권보호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다”면서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은 관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은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정은성 기자·김재훈 기자



‘전북지역 평화통일 강연회’ 13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주최로 전북지역 평화통일 강연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사진 왼쪽부터), 홍중식 전북부지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전북지역 자문위원들이 모금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최형열 도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해 전북도 실정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본방향과 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정성, 타당성, 주민 의견 및 사업 효과 등 사업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돼 있다.

이 밖에 조례안은 전북도가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공모일정이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해야”

김동구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가 새만금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4월 임시회에 상정했다.

정부는 국가핵심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올 상반기 중에 특화단지를 지정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나 배터리 등 주요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기업에 대한 가격적 혜택 등 집중투자로 맞서면서 양국 간 패권전쟁은 무어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건의안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의 자원 독점화와 미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 끼여 그 어느 때보다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발의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달 패일수록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세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그 중심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면서 이차전지 특화된 새만금 국가산단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이차전지 전후방 연관기업은 65개가 있고 지난 3월, 1조 2천억원 규

모의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최근 3년간 20개사 4조원의 투자를 확정 지었을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부품 기업의 집

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 이차전지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도내 6개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이차전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의 우수한 인프라는 물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이 적은 것은 물론 확장성까지 훌륭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투자를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집중하고 지방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문에도 명시됐듯이 국가 균형발전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매년 쌀 생산비 고시 후 농민 쌀 생산비보다 10% 높게 매입

민주 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의결에 앞서 직접 찬성토론회로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농민들께 참으로 송구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대체 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인 농정 정책을 확인한 만큼 쌀 수급안정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커져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농민들의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통해 쌀값의 실질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농민들의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통해 쌀값의 실질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쌀 시장가격이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쌀 시장가격제 도입 전에 시행되었던 목표가격제·변동직불금제를 부활시켰다. 정부에게 목표가격을 공시하도록 목표가격제를 부활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90%에서 소농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면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시키도록 했다.

전주 개최 ‘조국 저자와의 대화’ 참가신청 접수 1시간 만에 매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더전주포럼 황현선 대표 초청으로 오는 19일 전주에서 열리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가 사전 참가신청 1시간 만에 매진됐다.

주최측에서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전신청 시작 1시간 만에 전석이 매진된 것이다.

이번 사전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주시민은 물론 서울, 경기, 전남, 경남 등 전국에서 신청이 쇄도했다.

신청자들은 “저희가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등 조국 전 장관에게 일일이 응원메시지를 남겼다.

황현선 대표는 “신청이 순식간에 마감됐습니다”며 “이렇지만 유튜브 황현선IV 생중계로 조 전 장관님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저자와의 대화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열린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공간연구회

김진애 전 국회의원 초청 특강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시공간연구회가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2동) 의원 주관으로 13일 시청 강당에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도시건축학인 김진애 의원이 연단에서 ‘여행의 시간-여행자의 전주·시민의 전주’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진애 전 의원은 “전주시는 걷기 좋은 도시로 한옥마을 외에도 즐길거리가 풍부한 도시”라며 “도시 공간의 기능과 배치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져 더욱 성장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아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